

## 중국의 전자정부 구축현황과 시사점\*

The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E-Government in China

진설(Xue Chen)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연구원(주저자)

최석범(Seok-Beom Choi)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교신저자)

### 목 차

- |                          |          |
|--------------------------|----------|
| I. 서 론                   | V. 결 론   |
| II. 중국 전자정부의 일반적 고찰      | 참고문헌     |
| III. 중국 전자정부의 구축현황과 성과분석 | Abstract |
| IV. 한국 전자정부와의 비교와 시사점    |          |

### 국문초록

전자정부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대중들에게 편리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 오늘날 전자정부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수단으로서 현재 세계 여러 나라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 프로젝트이다.

국제적으로 전자정부가 보편화되는 추세 속에서 중국 또한 WTO 가입과 함께 전자정부의 발전이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자정부의 발전과 동시에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부와 전자정부에 관련된 법률과 정책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정부의 관리체계를 전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전자정부의 개념, 추진과정, 구축목적, 관련 정책내용 등 일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 한국과 중국의 전자정부 구축현황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주제어** : 중국 전자정부, 가상정부, 정부서비스, 정부 행정서비스, 한국 전자정부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413-B00011)

## I. 서론

전자정부는 1993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된 개념이다. 전자정부의 발전양상은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미국과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분산된 정보화사업이 추진되는 반면, 한국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자정부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수단으로서 현재 세계 여러 나라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 프로젝트임에는 이견이 없다.

중국 또한 WTO 가입과 함께 국제적으로 전자정부가 보편화되는 추세 속에서 전자정부의 발전이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국가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정보화는 정보화 추진의 관건이다. 정부정보화는 정보기술, 정보콘텐츠, 정보서비스 등 산업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개혁개방 발전 등 현대 중국의 중대한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요구에 발맞추어 정부가 전략적인 비전으로 현실의 변화에 부합하는 전자정부 구축의 이론, 가치 그리고 의의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20여년의 개혁개방을 거쳐서 중국은 이미 많은 변화를 겪었고, 현재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중진국 단계에 들어서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새로운 정부서비스와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정부기능을 경제와 사회발전을 창조하는데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전자정부의 출현과 발전은 중국 정부의 경영 효율을 개선시키는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직무감독과 공공서비스 수준, 그리고 국민경제와 사회정보화의 발전을 선도하여 정보산업의 전반적인 번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향후 5년 사이에 중국의 전자정부 구축영역에 대한 투자가 약 2조 위안을 초과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전자정부의 개념, 추진과정, 구축목적, 관련 정책내용 등 일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 한국과 중국의 전자정부 구축현황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 II. 중국 전자정부의 일반적 고찰

### 1. 전자정부의 개념

1990년대 이후, 국제 인터넷기술의 발전과 정부 관리에의 응용에 따라 전자정부 혹은 인터넷 정부관리라는 개념이 제기되었다. 이는 정부 내부에서의 행정 전자화와 자동화의 기초 위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부 각 부문과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여러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전자화, 디지털화 및 인터넷화된 정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한 정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에게 정보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발전단계에서 보면, 전자정부란 정부가 정보통신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다른 정보서비스 시설을 통하여 정부기관, 기업, 사회조직과 국민의 편의성을 위하여 자동화된 정보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이며,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이는 정부 관리와 서비스라는 현대화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기술과 인터넷기술의 기초 위에 구축된 정부 관리와 서비스로서 새로운 정부관리 패러다임이다.<sup>1)</sup>

전자정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가상정부(virtual government)”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24시간 운영되는 정부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sup>2)</sup> 전자정부의 이러한 가상성으로 인해 정부관리 방식에 중대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자정부의 구축은 조직설계, 운영방식, 소명의 변화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 정부행정 방식과 정부 관리의 의미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전자정부는 정보화 시대의 특수한 현상이라기보다 정부를 주체로 정보와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형 정부의 출현을 의미하며, 이것이 전자정부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개념이다.

## 2. 중국 전자정부의 발전단계

### 1) 전자정부 추진배경

1990년 이후 정보통신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고,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현대사회가 이와 같이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옮겨가면서 전자정부의 발전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가 전 세계 6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 가운데 89% 이상의 국가들이 전자정부 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것을 국가발전의 주요 프로젝트로 꼽고 있다.

전자정부의 발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첫째, 정부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가장 많은

1) 陶文昭, “電子政府研究”, 『電子政府期刊』, 第2期, 2005.2, pp.5-10.

2) 王趙雄, “淺論政府信息化”, 『中國信息導報』, 第10期, 2007.10, pp.8-9.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각종 정보를 처리하고 공유하여 정부업무를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과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구축하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전자상거래가 발전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응용시스템이 정부 각 부처의 업무와 잘 연결되어야 그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2) 전자정부 발전단계

### (1) 초기단계

초기단계 전자정부의 발전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사무자동화와 네트워크 구축시기이다. 중국은 1980년대 말, 중앙정부와 지방 행정기관에서 진행한 사무자동화 공정으로 각종 내부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둘째, 기초시설 구축시기이다. 1993년에 시작된 “3금공정(三金工程)” 즉, 금교공정(金橋工程), 금관공정(金關工程), 금카드공정(金卡工程)<sup>3)</sup>은 정보화 기초시설 구축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중점 산업과 정부 부문 간에 데이터와 정보의 공유를 진행시켰다. 본 구축단계를 거쳐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이 컴퓨터 시설을 갖추게 되었으며, 컴퓨터와 관련된 전자부문에 대하여 전문기술을 갖춘 많은 인재들이 정부기관에 채용되었고, 정부 공무원들이 컴퓨터 기능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 (2) 고속발전단계

1999년 1월 22일, 중국전신과 중국경제무역위원회 경제정보센터에서 주최하고 40여개 정보관련기관의 공동 발의로 “정부온라인공정”이 시작되었다. 정부온라인공정은 2년이란 시간을 거쳐 여러 방면에서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현(縣)급 이상 정부기관 중 50% 이상이 이미 초보적인 네트워킹 기초공정을 구축하였으며, 기술적으로 온라인 정보공유를 실현하였다. 2001년 5월 과학기술부는 광둥성 남해시에 중국 최초의 자주적 지적재산권을 갖춘 안전한 전자정부 플랫폼을 구축하였다.<sup>4)</sup> 이러한 전자정부의 빠른 발전은 다음 3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당과 국무원의 요구 때문이다. 중국은 전자정부에 대한 핵심기술 개발능력이 약해

3) 한문으로 표기하면 금잡공정이나, 대부분의 국내문헌에서는 금카드공정으로 표기하므로 본 논문에서도 금카드공정으로 표기하기로 함.

4) 周越, “我國電子政府發展現狀及問題分析”, 『遼寧工學院學報』, 第3期, 2006.3, p.8.

관련 기술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중국의 전자정부는 최종 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구축되지 못하고, 상급 지도자의 의견에 따라 구축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발전요구 때문이다. 당과 국가기관의 요구로 많은 지방정부들은 국민경제와 사회 정보화를 제10차 5개년계획의 중점 내용으로 삼았으며, 상해, 심천, 광둥, 천진 등은 디지털 시티 혹은 디지털 항구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상업과 공업, 세관 등의 부문에서도 각종 온라인 업무를 전개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정보화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작용이 촉진되고 있다.<sup>5)</sup>

셋째, IT기업의 지지와 발전 때문이다. 중국의 주요 IT기업들은 전자정부의 리스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급 정부 및 부서와 협력하여 중국 특유의 전자정부 사무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sup>6)</sup>

### 3. 중국 전자정부에 관한 선행연구

#### 1) 중국 전자정부에 관한 선행연구

陶書志(2007)<sup>7)</sup>는 정보화발전에 따라 중국의 전자정부 수준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반면 여전히 법률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 전자정부의 입법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있다. 柏必成(2008)<sup>8)</sup>은 전자정부의 빠른 발전은 반드시 법률이 기반이 되어야 함을 언급하면서 전자정부의 정책 법규와 표준화된 규범을 마련하는 것은 전자정부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요소이므로 관련 입법연구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陳嘉(2008)<sup>9)</sup>는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서는 일련의 전자정부 활동이 모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환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師訊東(2007)<sup>10)</sup>은 그동안 중국의 전자정부 구축이 정부의 인터넷 공정에서 시작되어 빠르게 발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 나아가 행정기능을 제고시키고, 행정원가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함을 지적하고 있다. 汪玉凱(2002)<sup>11)</sup>는 전자정부의 안전보장에 대한 중

5) 王德欣, “電子政務環境下信息資源的整合與共享”, 『臨沂師範學院報』, 第1期, 2006.1, p.5.

6) 陳果·湯鑫, “我國電子政務建設中的服務障礙及對策探析”, 『中國科技信息』, 第5期, 2007.5, p.7.

7) 陶書志, “中國電子政務立法的現狀存在問題及對策研究”, 華中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4, p.12.

8) 柏必成, “電子政務作為一種政府管理模式的内在本質”, 『行政論壇』, 第1期, 2008.1, p.12.

9) 陳嘉, “完善我國電子政務政策法律體系”, 『中國信息化』, 第7期, 2008.7, p.2.

10) 師訊東, “我國電子政務建設中的問題及對策研究”, 西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p.4.

11) 汪玉凱, 『中國政府信息化與電子政務』, 國聯新聞出版社, 2002.4, p.15.

요성과 시급성에 중점을 두고, 전자정부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가 전자정부 구축에 중요한 과제임을 제시하고 있다. 史磊(2008)<sup>12)</sup>는 전자정부가 최신의 정보네트워크 기술의 도입으로 그 역할과 업무, 조직구조가 바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일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며 정치적인 문제로서 반드시 민주정치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王芳(2009)<sup>13)</sup>은 전자정부를 국가 정보화 구축의 핵심이고, 중국의 정보와 서비스 산업 발전의 주요 동력이라 설명하면서 국민경제와 사회 정보화의 진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자정부가 구축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 2) 한국 전자정부에 관한 선행연구

박철우(2011)<sup>14)</sup>는 한국의 전자정부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 전자정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종합하여 향후 발전방안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오관석(2010)<sup>15)</sup>은 소셜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모바일 전자정부의 전략적 접근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조주은과 이성일(2009)<sup>16)</sup>은 전자정부 인터넷 서비스의 사용성과 사용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서비스 이용률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석주(2009)<sup>17)</sup>는 한국 전자정부서비스 수준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활성화 전략을 살펴보고 있다.

## 3) 중국 전자상거래에 관한 선행연구

최석범외 2인(2010)<sup>18)</sup>은 중국의 물류시스템이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배경하에 중국 전자상거래에서의 물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영찬외 7인(2010)<sup>19)</sup>은 중국의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물류현황, 물류관련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전자상거래에 따른 물류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2) 史磊, “政治發展視角下的電子政府构建”, 山西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p.36.

13) 王芳, “我國電子政務發展現狀與對策研究”, 『電子政務』, 第8期, 2009, p.3.

14) 박철우,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발전과정과 과제”, 『경영건설팅리뷰』, 제2권 제1호, 공주대학교 KNU 경영컨설팅 연구소, 2011.2, pp.145-160.

15) 오관석, “소셜 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모바일 전자정부를 위한 전략적 접근”, 『사회과학연구』, 제34권 제2호,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12, pp.135-161.

16) 조주은 · 이성일, “전자정부에서의 정보격차”, 『정보와사회』, 제16호, 한국정보사회학회, 2009, pp.53-82.

17) 김석주, “우리나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화 전략과 과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제12권 제2호, 한국지역정보학회, 2009.6, pp.31-57.

18) 최석범 · 이용근 · 이충배, “중국 전자상거래에 따른 물류인프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전자무역연구』, 제8권 제3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0.8, pp.65-84.

19) 이영찬 · 최창범 · 김시중 · 김장봉 · 강상규 · 박경희 · 오경희 · 장유식, “중국 전자상거래에 따른 물류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전자무역연구』, 제8권 제3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0.8, pp.19-38.

동혜의 2인(2009)<sup>20)</sup>은 중국 정부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입법현황을 살펴보고, 중국 전자상거래 법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윤광운의 2인(2009)<sup>21)</sup>은 중국의 전자상거래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을 검증하고, 향후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발전의 전략상 효과적이고, 유익한 변수를 중심으로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용근의 3인(2008)<sup>22)</sup>은 최근 중국의 전자상거래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의 전자상거래시장의 문제점과 추세를 분석하고 전망함으로써 중국 전자상거래시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최석범의 2인(2008)<sup>23)</sup>은 중국 전자상거래시장의 현황과 중국 전자상거래 산업과 한국기업의 진출 현황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중국 전자상거래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함으로써 한국기업들의 중국 전자상거래시장에 진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최석범의 1인(2006)<sup>24)</sup>은 중국에서의 전자상거래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병렬의 1인(2005)<sup>25)</sup>은 중국 전자상거래시장 발전의 장애물로서 인식되고 있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중국 정부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주요 정책을 통하여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선진적인 제도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윤광운의 1인(2003)<sup>26)</sup>은 기존 전자상거래의 문제점과 협력가능 요소, 우선순위 등을 파악하여 한국과 중국간 교역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전자상거래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 4) 기타 중국관련 선행연구

강대경(2010)<sup>27)</sup>은 중국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지향성과 현지화 그리고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심상렬의 1인(2010)<sup>28)</sup>은 중국 무역업체들과의 전자무역 구현에 대

- 
- 20) 동혜·장유식·박선영, “중국 전자상거래법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제7권 제1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9.2, pp.179-200.
- 21) 윤광운·이춘수·이본과, “중국 길림성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성과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1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9.12, pp.3-23.
- 22) 이용근·김창봉·김시중·박경희, “중국 전자상거래시장의 현황과 향후전망”, 『전자무역연구』, 제6권 제2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8.5, pp.45-68.
- 23) 최석범·이영찬·장유식,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진출전략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제6권 제2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8.8, pp.141-169.
- 24) 최석범·이영찬, “중국 전자상거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6, pp.1-22.
- 25) 이병렬·김종철, “중국 전자상거래 제도구축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7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5.9, pp.231-246.
- 26) 윤광운·김철호,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창간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3.11, pp.143-157.
- 27) 강대경,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시장지향성, 현지화, 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0.6, pp.161-182.
- 28) 심상렬·소단, “중국 무역업체의 전자무역 구현수준 결정요인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0.12, pp.3-24.



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송균외 2인(2010)<sup>29)</sup>은 중국 동·중·서부의 수출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 존재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며, 정분도외 1인(2009)<sup>30)</sup>은 IT산업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을 분석하고 있다. 서용원의 1인(2011)<sup>31)</sup>은 중국 동·중·서부에서 환경투자와 경제성장 간에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을 가지고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김성욱(2010)<sup>32)</sup>은 중국 녹색경영의 한계와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서용원의 1인(2010)<sup>33)</sup>은 중국의 물류현대화와 녹색물류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있으며, 강성민의 1인(2010)<sup>34)</sup>은 중국 환경정책의 녹색물류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Ⅲ. 중국 전자정부의 구축현황과 성과분석

#### 1. 중국의 전자정부정책과 법률현황

##### 1) 중국 전자정부 법률정책의 필요성

###### (1) 중국 전자정부 입법·제도화의 필요성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는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보기술 이외에 제도, 조직구조, 규칙, 표준 제정도 전자정부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중국 전자정부 구축의 추진과 함께 관련 법률정책이 즉시 제정되지 않아 전자정부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서 전자정부의 발전을 보장하는 법률·정책·법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정부 정보화를 위한 기본 법률과 정책 그리고 제도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전자정부에 대한 하나의 완전하고 통일된 법률과 정책 그리고 제도를

29) 송균·김수은·황윤섭, “중국의 지역별 수출과 경제성장 간의 영향관계 분석”,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0.6, pp.239-265.

30) 정분도·윤봉주, “한국 IT산업의 대중국 수출경쟁력 분석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1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9.12, pp.111-128.

31) 서용원·김성욱, “중국 각 지역 경제성장률과 환경투자 간의 관계”, 『전자무역연구』, 제9권 제2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1.5, pp.149-165.

32) 김성욱, “중국 기업 녹색경영의 현황과 한계” 『전자무역연구』, 제8권 제3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0.8, pp.123-140.

33) 서용원·신경환, “중국의 물류산업 변화와 정부의 녹색물류정책”, 『전자무역연구』, 제8권 제2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0.5, pp.131-154.

34) 강성민·김성욱, “중국의 환경정책과 녹색물류에 대한 시사점: 중국 환경정책수단에 대한 회귀분석을 기반으로”, 『전자무역연구』, 제8권 제2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0.5, pp.97-114.



마련하는 것은 향후 중국이 전자정부를 질서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 (2) 이익분배의 합리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중국 전자정부 구축은 중국 사회의 기본적인 수요에 따른 것이다. 중국의 전자정부는 정부 내부의 기능을 재편하고, 이익구성의 분배를 합리화한다. 예를 들면 상업, 세무관리 부문은 통상적으로는 두개의 독립적인 기능의 부서였지만 지금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중국기업 관리감독의 업무측면에서 볼 때, 두 부서의 통합관리가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기업과 국민은 정부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다수 기업과 국민들은 이것을 하나의 창구에서 one-stop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 기업과 국민의 이러한 서비스 수요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중국의 전자정부는 내부구조 재편과 함께 이익분배를 합리화하여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중국 전자정부에 대한 법률·정책의 구축 강화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 (3) 전자정부의 보안과 정부정보공개에 대한 요구

전자정부는 보다 높은 정보보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정보보안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sup>35)</sup> 그러나 중국에서는 수많은 자료가 보안기밀 상태로 있어 자체 효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보는 흐르는 과정에서만 최대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정보의 권리를 함께 누릴 수 있는지는 기술적인 문제로는 해결할 수 없고 오직 규범화된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정부가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어떤 정보를 비공개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개의 원칙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 2) 중국 전자정부의 법률과 정책 현황

### (1) 중국 전자정부관련 법률정책

1999년 중국 정부는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규칙(Computer Software Protection Regulations)”, “컴퓨터시스템안전보호규칙(Rule on Protection of Computer System Security)”, “통신규칙(Communication Rule)”, “인터넷서비스접속관리방법(Internet Service Management Approach)” 및 “인터넷보안설치결정(The Decision for the Safeguarding Internet Security)” 등의 법률을 발표하

35) 李燕英, “電子政務立法問題探析”, 『行政論壇』, 第5期, 2004.5, pp.66-67.

여 통신업체관리 법률체계, 인터넷관리 법률체계, 정보산업정책체계 및 인터넷 지적소유권보호 법률체계를 구축하여 전자화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같은 해 “정부인터넷공정”을 실시하고 2002년 “전자정부구축에관한지도의견(About E-Government Guidance)”을 발표하였고, 전자정부에 관련된 각종 법률들을 연이어 제정하였다. “행정허가법(Administrative Licensing Act)”, “전자서명법(Digital Signature Act)”, “정부정보공개규칙(Government Information Disclosure Rule)”, “전자정부감독법(E-Government Supervise Act)” 등이 이에 해당한다.<sup>36)</sup>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은 전자정부의 조직법이며, 주로 전자정부의 체계를 조정하고 전자정부의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며 관련 부서와 각 부서의 직권을 조정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리고 “전자정부인프라구축촉진법(Promote the E-Government Infra Construction Act)”은 주로 국가 전자정부 네트워크, 정부 정보자원 목록체계와 교환시스템, 정보안전 인프라구축에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전자정부 인프라에 대한 중복투자과 맹목적인 구축을 방지하고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sup>37)</sup>

“전자정부감독법”은 전자정부 관련 법률과 진행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사항을 다루고 있다. 전자정부 내용의 상당수는 모두 정부의 행정행위와 관련되므로, 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를 마련하고 네트워크 행정행위의 법적 책임범위를 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전통적인 행정행위는 모두 그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규정이 있지만, 네트워크상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그 뚜렷한 법률적 책임 권한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sup>38)</sup>

또한, 전자정부 실천을 위한 국가 “정부정보공개조례(The National E-Government Practice for the Open Government Information Rule)”가 2007년 1월 국무원 자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정부 사이트 촉진방안과 전자정부공개를 위한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 정부 사이트는 정보공개의 목록을 만들고, 정보공개 책임제도와 업무계획, 과정, 결과 등에 관련된 기준에 따라서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정보공개의 질과 효율이 상승되었고, 정부의 투명성 정도도 대폭 제고되었다.<sup>39)</sup>

36) 衣彩虹, “构建我國電子政府的法律体系研究”, 東北師範大學 碩士論文, 2008.5, pp.9-11.

37) 易成東, “電子政務法律問題探析”, 『黑龍江省政法管理干部學院學報』, 第6期, 2005.6, pp.12-14.

38) 賀佐成, “電子政務法制建設的思考”, 『行政論壇』, 第5期, 2005.5, pp.7-9.

39) 衣彩虹, 前揭書, p.12.

## (2) 주요 법률정책 현황

2003년 8월 27일 “행정허가법(Administrative Licensing Act)”은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발표되었고, 2004년 7월 5일부터 실시되었다. “행정허가법” 제25조에서는 국무원의 승인 하에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는 통일성, 효율성의 원칙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관련 행정 허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3조에서는 행정기관은 제도를 제정하고, 전자정부 구축을 촉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sup>40)</sup> 이 조항을 통해, 행정기관의 웹 사이트에서 행정허가사항을 공포하고, 신청자는 편리하게 행정허가 신청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4년 8월 28일 전자서명법은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되었고, 2005년 4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국무원이나 국무원 관련 부문이 정부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서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서명법은 전자정부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전자통관, 전자행정에서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sup>41)</sup>

2007년 1월 17일 “정부정보공개규칙”은 국무원 제165회 상무회의에서 발표되었고, 2008년 5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이 규칙에 의하여 전자정부의 정부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안정성에 대한 원칙들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 규칙이 실행된 후에 전국적으로 불법적인 개인 및 상업 정보 공개 사건이 5년 전보다 68% 감소하였다.

## 2. 중국 전자정부의 구축현황과 성과분석

### 1) 중국 전자정부의 구축현황

중국의 전자정부 규모가 급증하고 각종 법률정책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전자정부 구축이 한 층 더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추진과제는 <표 1>과 같고, 그 발전의 추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지방 정부들이 국민경제와 사회정보화를 위한 전자정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十二金”공정<sup>42)</sup>을 핵심으로 하는 전자정부 프로젝트도 계속 발전되고 있다. 2006년에는 정부 부서 간의 정보자원을 종합, 공유하는 등의 통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북경 전자정부시스템 공유정보자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전면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서비스를 전개하였다.

40)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637/module18164/info49055.htm>

41) 李真, “政府信息公開的立法研究”, 『西安交通大學學報社會科學』, 第3期, 2010.3, pp.10-12.

42) 十二金 (twelve operation systems): 정부 업무 처리에 대해 만든 12개 중요 정보응용시스템이다.

〈표 1〉 주요 전자정부 프로젝트 현황

공정 이름	주요 부문	주요 업무
금관공정 (金關工程)	해관, 상무부, 공상, 세무, 외환, 교통운송	허가증 관리, 수출입 통계, 수출세금환급, 수출외환회수와 수입어음 지급 확인, 항만(port)전자법 집행시스템, 가공무역 네트워크 심사허가 등 6개 업무 응용시스템
금세공정 (金稅工程)	성(省),시(市),현(縣) 3급 세무기관	부가가치세 위조방지, 부가가치세를 컴퓨터로 교차 대조하여 계산하고, 영수증 협조하여 검사
금재공정 (金財工程)	재정부문 및 전국 각급 재정관리부문	재정 종합업무관리시스템으로 예산집행, 심사, 국고 집중 지급관리, 현금관리, 월급 지급관리, 국채관리, 정부구입관리, 고정자산관리, 수입관리, 재정경제 경기분석, 표준 코드와 외부 연결 등 11개 서비스 시스템을 포함
금홍공정 (金宏工程)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재정, 상무, 중국인민은행,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관세총국, 국가통계국, 국가외환관리국	거시 경제관리 정보업무 응용시스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및 계획시스템, 가격감독 관리정보시스템,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 관리정보시스템, 전략적 자원정보시스템, 재정경제분석예측시스템, 금융운행 분석정보시스템, 국제수지평형관리정보시스템, 국유 중요 기업업무정보시스템
금순공정 (金盾工程)	공안시스템	전국 인구정보관리시스템, 파출소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전국 소방안전 중요 단위 정보시스템, 전국 위법 범죄 인원 정보시스템, 전국도난자동차 정보시스템, 전국 경제범죄 사건 정보관리시스템, 전국 공안 정보관리시스템, 경찰위법사건 단서수사시스템
금카드공정 (金卡工程)	금융시스템 사회서비스 부문	은행 카드, IC카드로 통신, 사회보장, 공안, 세무, 교통, 건축 및 공공사업, 위생, 석유, 조직기관 코드관리 등에 사용
금심공정 (金審工程)	회계 감사시스템	현장 회계감사 실시시스템, 네트워크 회계감사 실시시스템, 회계심사 업무시스템
금농공정 (金農工程)	농업시스템	농산품시장 경보시스템, 농산품과 생산자료 시장 감독관리 정보시스템, 농촌시장과 과학기술 정보서비스시스템
금보공정 (金保工程)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문	사회보험시스템,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금질공정 (金質工程)	품질 감독시스템	품질검사 업무감독 관리시스템, 품질검사 업무보고 심사시스템, 품질검사 정보서비스시스템
금여공정 (金旅工程)	관광 업체	행정관리부문의 업무자동화 네트워크, 업무관리 네트워크시스템, 대중관광문의 네트워크시스템
금수공정 (金水工程)	수리, 전기부문	도시 수자원 실시간 감시와 관리시스템, 전국 수도(水土)감시 네트워크와 정보시스템, 중국 농촌수리관리 정보시스템, 전국 저수지 국민관리 정보시스템, 국가 자연자원과 지리공간 정보베이스 프로젝트, 수리자원 데이터분석센터
금토공정 (金土工程)	국토 자원관리부문	경지보호국가감독관리시스템, 광산자원국가보호보장시스템, 지질재해예보 및 응급지도시스템, 국토자원데이터베이스
금신공정 (金信工程)	공상관리부문	상표심사업무시스템, 인터넷서비스시스템, 기업등기관리시스템, 유통영역상품품질검사시스템, 상공업분국심판법집행관리시스템, 전국 상공업행정관리시스템, 동영상회의시스템
금지공정 (金智工程)	교육 과학 연구부문	전국최대의 공익성 컴퓨터네트워크, 세계에 제일 큰 규모의 학술망

자료: 王長胜, “電子政務發展新階段”, 『中國電子政務發展報告2010』,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0.8, pp.2-3.

둘째, 정부서비스사이트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서비스 내용이 더욱 풍부해지고 기능도 계속 증가되었다. 중앙과 관세총국, 국가세무서, 지방세청 등도 인터넷 업무를 실행하였다. 예를 들어, 북경상공행정관리국은 인터넷 업무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인터넷 전문 검사, 인터넷 등록과 연 1회의 정기 검사, 인터넷 운전자 신분증 및 운영행위 합법적 인증, 도메인네임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셋째, 안전제도가 끊임없이 개선됨에 따라 정부정보에 대한 안전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04년 8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1회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정식서명법”이 통과되었고, 2005년 4월부터 실행되었다. 이 법은 전자정부 서명을 인정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어, 전자정부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안전한 법률 환경을 만들었다. 동시에 전자정부의 특수성이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발전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sup>43)</sup>

넷째, 국민들은 정부사이트를 이용하여 국민들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성과를 거둔 모든 시의 지도자들은 이메일과 전화를 개방하였다. 많은 정부사이트들은 메모판을 설치하였고, 지도자들 또한 사이트를 개통하였다. 이는 국민과 정부의 직접적인 소통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많은 지도자들은 국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사회적인 아이디어를 수집하였다. “물권법” 등의 주요법률이 대중의 사회의견을 반영한 결과이고, 과학 입법, 민주 입법의 새로운 경로를 열었다.

마지막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은 농촌의 과학적 발전의 전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절강성은 100만 명의 농민이 우체통 공정을 통해서 농업·교역·과학·인재 등의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였고, 절강성 모든 지역의 95% 이상이 농업정보소를 설치하였다.<sup>44)</sup>

## 2) 중국 전자정부 프로젝트 현황

20여년 동안의 전자정부 구축을 통해서 국가 주요 경제, 사회 관리부문과 정보화수준이 모두 상승하였다. 중국 정부는 세관, 세무, 은행, 상공, 교통 등 경제사회발전의 중요분야에서 정부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회계, 공안 등의 방면에서도 전자정부 업무시스템을 구축하였다.<sup>45)</sup> 이러한 업무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경제적 효익과 사회적 효익이 동시에 제고되고 있다.

### (1) 금관공정

금관공정<sup>46)</sup>은 1994년부터 해관 세무 등의 시스템에 네트워크화를 실현하였고, 전국적으로

43) 白樟, “對完善電子政府管理機制的思考”, 『信息化建設』, 第10期, 2007.10, p.13.

44) 李翠錦, “電子政府中的電子文件採集”, 『中國檔案』, 第3期, 2005.3, pp.62-63.

45) 曲成義, “電子政務安全保障體系探索”, 『信息技術與標準化』, 第11期, 2001.11, pp.19-24.

보급되었다. 전체 시스템은 3개의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수출기업의 세금을 회수하여 신고하는 시스템, 대외경제무역 주요 관리부문을 대조하여 계산하는 시스템, 세무기관이 회수한 세금을 심사하는 시스템이다. 금관공정을 통해 수출 세금 회수의 운영, 관리, 정책의 전자화가 실현되었고, 수출 세금 회수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납세기관, 해관, 관세총국 등의 정보자원 공유를 실현하는 동시에 수출 세금의 사취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국제무역에서의 서류를 없애고, 거래 과정을 전자화하였으며, 정보전송 네트워크를 실현하여 수출입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었고, 각급 관세와 감독 기관이 24시간 네트워크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금관공정을 통해 인터넷 납세업무도 크게 발전하였다. 청도 해관을 예로 들면, 2009년까지 청도 해관의 인터넷 납세금액은 657억 5천만 위안이고, 이는 총 납세금액의 83%를 차지하였다.<sup>47)</sup>

## (2) 금세공정

중국 세무총국은 전체 세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강화와 과세의 핵심인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의 수수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금세공정을 추진하였다. 금세공정은 세무총국을 중심으로 성(省)급·지방시(市)급·현(縣)급 세무국청을 연결하는 전산네트워크의 구축을 기반으로 한다. 금세공정의 주요 내용은 전용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일반납세자에게는 단계적으로 위조방지시스템에 의한 전용영수증 발행을 요구하고, 세무기관 내부적으로는 세무총국으로부터 현금 세무국청에 이르는 전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용영수증의 정상적인 수수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업무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금세공정은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해 세금징수율을 대폭 높였고, 부가가치세 징수율도 2000년 62%에서 2010년에는 86%까지 상승시켰다. 국가 세금시스템 세수비용이 크게 절감되었고, 매년 세수 비용은 100억 위안이 절약되었다. 또한, 세금 징수시스템의 인력은 2000년 200여명에서 2002년에는 적게는 12명까지 줄어들었고, 금세공정을 통해 중국 전국 세금징수율은 75~80%로 상승되었다.

## (3) 금카드공정

1993년 6월 국무원은 중국 전자화폐 발전을 목적으로 전자화폐 응용을 중심으로 하는 각

46) 금관공정은 중국 정부가 컴퓨터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국가의 대외 무역과 관련된 영역에 표준화, 규범화, 과학화, 네트워크화 및 현대화 관리의 국가정보화를 실현하는 국가정보화 중요시스템 공정이다. 이는 중국 12개 중요 업무 중의 하나이다.

47)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tab7973/info156402.htm>



종 카드 응용시스템 공정을 개시하고, 컴퓨터, 통신 등 현대 기술을 기초로 은행카드 등을 매체로 한 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정보이체 방식으로 화폐 유통을 실현하였다.

금카드공정의 목적은 현대화, 실용적인 전자화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국 국정과 부합하고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금융카드 업무관리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3억 인구를 포함하는 400개 도시에서 금융카드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금카드공정의 실시는 중국 상업은행의 전자화를 촉진하였고, 전자행정 발전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금융카드를 제외하고도, 하나의 IC카드(Integrated CircuitCard)로 금융, 통신, 교통, 무역, 여행, 사회보험, 기업관리, 세금징수, 조직기구 코드(organization code), 의료보험, 은행 고객관리 및 공공사업 비용징수관리 등 다양한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에 많은 편의를 가져오고 있으며, 비용납부처리가 간소화되고 사회정보화를 실현하고 있다.

#### (4) 금질공정

금질공정은 국가 전자정부플랫폼에 의하여 표준, 통일, 기능 완화, 안전한 검역 정보화 네트워크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설립한 공정이다. 금질공정을 통해서 품질감독검역 정보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품질감독검역법 집행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부행정관리 모델을 개선하고, 검역업무 효과를 향상시킴으로써 대외경제무역의 발전을 촉진하였고, 대중에게 많은 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공정을 통해 검역업무 컴퓨터관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구축하여 검역업무 데이터베이스를 설립함으로써 정보자원 공유를 향상시키고, 검역 정보화 표준체계를 구축하였다.

금질공정은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각급 검역기관이 관리서비스형으로 전환되는 것을 촉진하며 품질감독의 법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검역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검역시스템 집행의 전자화, 정보화를 촉진하였다.

### 3) 중국 전자정부 프로젝트 성과분석

첫째, 중국의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이 서비스정부건설의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공산당 제17기 회의에서 서비스정부의 건설이 중요한 업무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중국에서 전자정부의 구축을 통해 정부의 업무능력 혁신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중국이 전자정부의 구축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주요 국가들이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서비스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의 전자정부의 추진은 선진국형 정부업무의 구현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



다는 점이다. 1970년대부터 서양국가들은 정부의 업무를 개혁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에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었으며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서는 선진국들은 정보의 공공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부 개혁의 핵심전략으로서 전자정부의 구현을 추진하였으며 중국도 정부의 서비스 업무의 촉진을 위하여 전자정부의 추진이 필수불가결한 선택이 되었다.

셋째, 중국의 전자정부의 추진은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하게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정보화와 정부관리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였고 정부의 기능변화에 치중하여 전자정부의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였으며 특히 공공서비스를 크게 강화하였다. 이렇게 신속하게 전개된 중국의 전자정부의 건설은 정부의 개혁을 달성하였고 새로운 성장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중국은 전자정부의 구축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전자정부의 구축으로 중국의 경제사회 관리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경제사회 관리부문에서의 정보화가 크게 발달하였다. 비록 1990년대부터 중국은 세관, 세무, 은행, 상공, 교통 등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분야에서만 정부의 정보화를 추진하였지만 2000년대의 전자정부의 구축을 통해 국가업무 전반의 정보화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다섯째, 중국의 전자정부의 구축으로 정부의 정보공개업무가 더욱 촉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새로운 경로가 제공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은 전자정부사업을 통하여 정부의 정보공개가 주요사업으로 부상되었고 전자정보사이트를 통하여 국민과의 대화가 촉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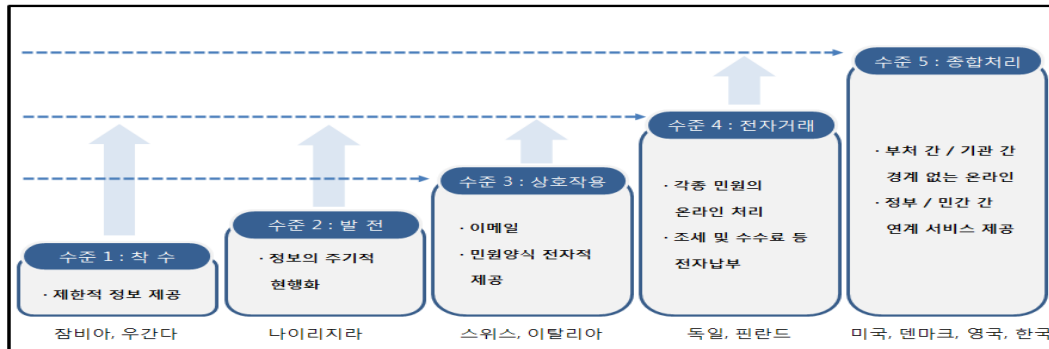
## IV. 한국 전자정부와의 비교와 시사점

### 1. 한국 전자정부와의 비교

#### 1) 중국과 한국 전자정부서비스 수준 비교

UN은 전자정부의 발전단계를 “착수-발전-상호작용-전자거래-통합처리”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미국과 한국은 이미 전자정부가 고도로 발전하여 각 부서와 기관 간에 경계가 없고, 정부와 민간 사이에 연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UN이 발표한 국가 정보화 지수가 2010년에 1위에 올라섰고, 부서 홈페이지를 비롯한 중앙 행정기관에서 총 410개의 전자정부서비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기업이나

공무원 등 특정 수요자 대상 사이트가 131개(32%), 일반 국민 대상 사이트가 279개(68%)에 이르며, 기업의 74%가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림 1> 전자정부 구축 단계와 주요 국가별 현황

자료: UN, *Benchmarking e-Government*, 2005. p.15.

반면, 중국의 전자정부 발전수준은 아직 초보적 단계로서 상호작용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조세나 수수료의 전자납부는 일부 지역과 기관에서만 가능하고, 각 부서와 기관, 특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정부가 범국가적 사업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따라서 통일된 법률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

## 2) 중국과 한국 전자정부 구축 현황 비교

중국의 전자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큰 발전을 거듭했지만, 전자정부가 발달한 한국과 비교하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2008년 한국의 전자정부 발전 수준은 세계 6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은 “e-Korea”계획을 통하여 107개 부분의 업무를 연결시켜 11개의 주요 업무시스템으로 통일화시켰고,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2011년 2월 한국의 전자정부 응용능력은 UN 경제와 사회의 “전자정부 발전 현황과 추세”에서 전 세계에서 6위를 차지하였고,<sup>48)</sup> 중국은 67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많은 수의 전자정부 사이트를 개설하여 왔다.<sup>49)</sup> 하지만 대중의 참여 비율이 여전히 높지 않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아직 중국의 전자정부 수준은 상호작용도 낮고, 시작단계에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8) 信息産業部電子科技情報研究所, <http://www.etiri.com.cn/>

49) 中國電子政務技術與應用大會 (eGovChina) 中國電子政務發展現狀研究白皮書, 2004.

〈표 2〉 한·중 전자정부 이용 정도 대조표

국가	이용률			
	시작단계	확장단계	업무처리	접속
한국	100%	95%	60%	85%
중국	100%	76%	4%	26%

자료: 王藝, “韓國電子政務對我國啓示”, 『必讀文庫』, 第7期, 2009.7, pp.11-13.

〈표 2〉를 보면, 업무처리 이용률은 한국이 60%인데 비해 중국은 4%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업무처리 이용률이 낮은 원인은 전자정부 구축 과정에서 통일되고, 통합된 조직 관리 체계가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급 정부와 기관들이 각자 자신의 이해관계와 편의성에 따라서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의 궁극적 이용자인 국민들이 이에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어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통일된 법률정책과 표준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법률정책 부분을 보면, 중국은 2004년부터 전자서명법 등 전자정부 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을 제정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며, 각 지방정부와 부문 사이에 서로 다른 규정이 존재한다. 그에 비해 한국은 1998년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999년 “전자서명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발표하고 2001년 “전자정부법”을 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통일적인 법률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

한국은 전자정부 구축 과정에서 통일된 계획과 표준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구축 초기부터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은 전자정부를 구축할 때 통일된 계획과 표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정부간, 기관간 업무가 상당부분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오히려 전자정부의 이념에 역행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전자정부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한국은 전자정부 구축의 실행과정과 현실에 따라 법률체계도 함께 구축하고 탄력적으로 현실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 전자정부는 구축 속도와 양적인 증가면에서는 상당히 빠른 편이었지만, 주도적인 법률과 정책이 없어서 효율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은 정부가 투자를 하고, 투자 과정에서 전자정부 투자이익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중국의 전자정부도 정부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았지만, 투자 과정이 분산되고 이익을 중시하지 않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2,500여개 정부 포털사이트 가운데 약 1/3이 개통되지 않고 있으며, 다른 1/3의 사이트 또한 이용가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up>50)</sup>

한국과 중국의 전자정부의 차이를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한·중 전자정부의 차이

관 리 요 소	중 국	한 국
서비스 이념	“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이념” 부재	“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이념”의 완성
법률정책	전자정부 법률정책과 통일된 법률체계의 미비	통일된 전자정부 법률체계 수립
조직관리체계	각 관련부문의 분산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조직관리 체계
전체 계획과 표준	일부의 표준 제정 그러나 각 부문과 지방정부에서 각기 다른 표준 실행	전체 계획 중시 및 통일된 표준 제정
2010년 전 세계 순위	64	6

자료: 王藝, “韓國電子政務對我國啓示”, 『必讀文庫』, 第7期, 2009.7, pp.11-13; 電子政務網 데이터를 통하여 자가 작성.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 전자정부 사이트(www.korea.go.kr)는 그 안에 각 공공기관, 행정부, 국회/법원 등의 서비스를 모두 한 번의 등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통합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www.minwon.go.kr)를 비롯하여 홈택스(hometax.go.kr), 기업민원단일창구(www.g4b.go.kr),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등의 민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기 다른 업무와 각기 다른 지자체 관할 사무를 민원사이트에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반면, 중국 전자정부 사이트(www.e-gov.org.cn)는 각 성·시의 전자정부와 연결되어 있지만, 전자행정, 전자당무(電子黨務) 등 중국 정부와 당의 업무를 설명하고 그 성과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 온라인 서비스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온라인 서비스는 각 지방의 전자정부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야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그나마도 주해(珠海), 상해(上海) 등 개방된 경제 대도시의 지방정부에서만 일정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다. 주해의 지방정부 사이트를 예로 들면, 교육(장학금 신청, 등록 등), 의료(가족계획 관련 서비스 등), 사회보장(의료보험, 양로보험 신청 등), 교통(자동차 등록 등)의 업무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성·시의 전자정부에서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50) 資料來源: “關於韓國電子政務推進經驗的思考”, <http://www.hanzhong.gov.cn/cgzx/434597364041252864/20090312/524790.html>

## 2. 중국 전자정부 구축에 대한 시사점

중국과 한국의 전자정부 비교를 통하여 살펴본 중국의 전자정부 개선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중국 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이 양질의 대국민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전자정부 구현을 행정기관의 생산성과 투명성 그리고 민주성과 연계시키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sup>51)</sup> 중국은 각 지방정부와 기관들이 그들의 이해관계와 편의성에 목적을 둬에 따라 전자정부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궁극적으로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국민이다. 국민들이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전자정부는 활성화되기 어렵다.<sup>52)</sup> 따라서 전자정부 구축시 가장 가치를 두어야 할 부분은 전자정부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중시하고, 대중에 대한 서비스 네트워크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국민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국민에게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다.<sup>53)</sup>

둘째, 중국 전자정부의 구축이 범정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정보화와 전자정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 주도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집행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sup>54)</sup> 중국 또한 정부 주도하에 전자정부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정부의 의식수준이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통일된 전자정부 구축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중국의 전자정부가 효율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 구축이 범국가적인 사업이라는 인식하에 정부를 중심으로 통일된 법률을 제정하고, 각 정부기관과 지방 기관들이 표준화된 법과 시스템을 따를 수 있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 V. 결 론

2006년 1월 1일 중국 정부 인터넷포털사이트가 공개되었는데, 이는 중국 전자정부의 구축

51) 한국 전자정부법 제1조.

52) 김석주, 전계서, pp.48-49.

53) 周宏仁, “電子政府建設的基本原則”, 『電子政務』, 第23期, 2005.12, pp.7-9.

54) 박철우, 전계서, p.150.

이 한 층 더 발전하였다는 증거인 셈이다. 또한 UN은 “2005년 전 세계 전자정부 표준보고”에서 중국 정부의 전자정부 구축에 대한 노력을 우호적으로 평가하였다. 중국의 전자정부는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전자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큰 발전을 거듭했지만, 전자정부가 발달한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각 부서와 기관, 특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정부에 대한 통합된 법률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이후의 발전과정에서도 중국은 수많은 전자정부 사이트를 개설하였지만, 대중의 참여 비율은 여전히 높지 않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실정과 비교했을 때, 업무처리 이용률이 한국이 60%인데 반하여 중국은 4%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중국의 경우 전자정부 구축 과정에서 통일되고, 통합된 조직 관리 체계가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급 정부와 기관들이 각자 자신의 이해관계와 편의성에 따라서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의 궁극적 이용자인 국민들이 이에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어볼 수 있다.

한국은 전자정부 구축 과정에서 통일된 계획과 표준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구축 초기부터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한 반면, 중국은 전자정부를 구축할 때 통일된 계획과 표준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업무가 통합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전자정부가 성공을 거두고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그들의 편의를 위한 통일성과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의 전자정부가 힘이 있는 당과 국무원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미루어 중국이 향후 한국과 같은 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이해와 홍보를 중시하는 전통 정부의 이념에서 탈피하여, 대중과 가깝고,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형 정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중국 정부에 대한 시사점은 전자정부를 양질의 대국민 종합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중국 전자정부를 추진하여야 하는 것인데 한국 정부는 한국의 전자정부의 구축사업이 세계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 정부의 전자정부 구축 노하우와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전자정부 구축업체와 함께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 참 고 문 헌

- 강대경,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시장지향성, 현지화, 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0.
- 강성민·김성욱, “중국의 환경정책과 녹색물류에 대한 시사점: 중국 환경정책수단에 대한 회귀분석을 기반으로”, 「전자무역연구」, 제8권 제2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0.
- 김성욱, “중국 기업 녹색경영의 현황과 한계” 「전자무역연구」, 제8권 제3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0.
- 김석주, “우리나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화 전략과 과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제12권 제2호, 한국지역정보학회, 2009.
- 동혜·장유식·박선영, “중국 전자상거래법제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제7권 제1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9.
- 박철우,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발전과정과 과제”, 「경영컨설팅리뷰」, 제2권 제1호, 공주대학교 KNU 경영컨설팅 연구소, 2011.
- 서용원·김성욱, “중국 각 지역 경제성장과 환경투자 간의 관계”, 「전자무역연구」, 제9권 제2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1.
- 서용원·신경환, “중국의 물류산업 변화와 정부의 녹색물류정책”, 「전자무역연구」, 제8권 제2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0.
- 송군·김수은·황윤섭, “중국의 지역별 수출과 경제성장 간의 영향관계 분석”,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0.
- 심상렬·소단, “중국 무역업체의 전자무역 구현수준 결정요인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0.
- 오관석, “소셜 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모바일 전자정부를 위한 전략적 접근”, 「사회과학연구」, 제34권 제2호,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 윤광운·김철호,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창간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3.
- 윤광운·이춘수·이본과, “중국 길림성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성과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1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9.
- 이병렬·김종철, “중국 전자상거래 제도구축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7권 제3호, 한



- 국통상정보학회, 2005.
- 이영찬·최창범·김시중·김창봉·강상구·박경희·오경희·장유식, “중국 전자상거래에 따른 물류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전자무역연구」, 제8권 제3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0.
- 이용근·김창봉·김시중·박경희, “중국 전자상거래시장의 현황과 향후전망”, 「전자무역연구」, 제6권 제2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8.
- 정분도·윤봉주, “한국 IT산업의 대중국 수출경쟁력 분석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1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9.
- 조주은·이성일, “전자정부에서의 정보격차”, 「정보와사회」, 제16호, 한국정보사회학회, 2009.
- 최석범·이영찬, “중국 전자상거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
- 최석범·이영찬·장유식,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진출전략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제6권 제2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8.
- 최석범·이용근·이충배, “중국 전자상거래에 따른 물류인프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전자무역연구」, 제8권 제3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0.
- 曲成義, “電子政務安全保障体系探索”, 「信息技術与標準化」, 第11期, 2001.
- 陶文昭, “電子政府研究”, 「電子政府期刊」, 第2期, 2005.
- 陶書志, “中國電子政務立法的現狀存在問題及對策研究”, 華中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 白檸, “對完善電子政府管理机制的思考”, 「信息化建設」, 第10期, 2007.
- 柏必成, “電子政務作為一種政府管理模式的內在基础”, 「行政論壇」, 第1期, 2008.
- 史磊, “政治發展視角下的電子政府构建”, 山西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 師訊東, “我國電子政務建設中的問題及對策研究”, 西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 易成東, “電子政務法律問題探析”, 「黑龍江省政法管理干部學院學報」, 第6期, 2005.
- 王趙雄, “淺論政府信息化”, 「中國信息導報」, 第10期, 2007.
- 王德欣, “電子政務环境下信息資源的整合与共享”, 「臨沂師範學院報」, 第1期, 2006.
- 王芳, “我國電子政務發展現狀与對策研究”, 「電子政務」, 第8期, 2009.
- 汪玉凱, 「中國政府信息化与電子政務」, 國聯新聞出版社, 2002.
- 李燕英, “電子政務立法問題探析”, 「行政論壇」, 第5期, 2004.
- 李眞, “政府信息公開的立法研究”, 「西安交通大學學報社會科學」, 第3期, 2010.
- 李翠錦, “電子政府中的電子文件采集”, 「中國檔案」, 第3期, 2005.

- 衣彩虹, “构建我國電子政府的法律体系研究”, 東北師範大學 碩士論文, 2008.
- 周越, “我國電子政府發展現狀及問題分析”, 「遼寧工學院學報」, 第3期, 2006.
- 周宏仁, “電子政府建設的基本原則”, 「電子政務」, 第23期, 2005.
- 中國電子政務技術与應用大會(eGovChina), 中國電子政務發展現狀研究白皮書, 2004.
- 陳果·湯鑫, “我國電子政務建設中的服務障礙及對策探析”, 「中國科技信息」, 第5期, 2007.
- 陳嘉, “完善我國電子政務政策法律体系”, 「中國信息化」, 第7期, 2008.
- 賀佐成, “電子政務法制建設的思考”, 「行政論壇」, 第5期, 2005.

## ABSTRACT

## The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E-Government in China

Xue Chen\* · Seok-Beom Choi\*\*

E-Government provides convenient information and service, and enhances service quality to people by using new technology. E-Government now becomes representative project that many countries in the world are promoting competitively as a key method improv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With joining WTO, China is also facing a new challenge as e-Government is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In accordance with this trend china's e-Government is developing rapidly. But at the same time it also reveals many problems. Especially government and e-Government laws and policies are not integrated into one and legal basis to change management system of government is still weak.

Thus, this study deals in generalities such as the concept of Chinese electronic government, the process, the purpose, related issues of the policy by comparing the current state of the Chinese electronic government with Korea electronic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Key Words** : China e-Government, Virtual Government, Government Service, Public Service, Korea e-Government

---

\* Researcher, Korea E-Trade Research Institute

\*\* Professor,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College of Business & Economics, Chung-Ang University